

<총평>

2019년 2월 23일 실시한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는 이해를 요하는 이론 문제가 6문제, 법령 문제가 14문제이다.

법령 문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교부세법,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론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출제되었다(출제된 지문의 내용이 위계점 지방자치론 교재에 모두 있음).

한편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도 위계점 지방자치론 교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018년 6월에 실시했던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의 경우, 이론 문제가 1문제에 불과하고,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1문제, 한국의 지방자치역사 2문제, 법령 문제가 16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상당히 높았었다.

이에 비해 이번에 실시된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은 2018년 6월에 실시되었던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에 비해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위계점 지방자치론 교재와 강의로 공부한 수험생들 중 고득점을 획득한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알파행정학 카페 글이나 문자 준 수험생 중 100점 맞았다고 하는 수험생이 상당수 있음)

지방자치론은 범위가 좁고(위계점 지방자치론 교재 기준으로 본문, 기출문제, 예상문제, 지방자치법 전체 조문 모두 포함해서 380페이지 정도), 행정학, 행정법, 헌법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될 경우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 선택한 수험생에 비해 유리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 관련 법령 내용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부족한 수험생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다.

이 정도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라면 90점 이상은 우수(시험합격에 기여)하고, 80점에서 85점은 보통, 75점 이하는 미흡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론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양이 적은 반면, 암기해야 할 법령 내용이 많다.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 암기하기 바라며, 교재 뒤 부록에 있는 지방자치법은 전체 조문을 꼭 읽어두는 것이 좋다. 또한 한국의 행정 법령에 있는 지방자치론 관련 법령 내용도 꼭 봐두기 바란다.

끝으로 지나간 시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 ② 보유차량이 30대 이상인 자동차 운송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기본사항을 정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 ②(옳음) 보유차량이 30대 이상인 자동차 운송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한국의 행정법령」에서 소개했던 내용이다. 다만, 상세한 내용을 모두 암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문을 보면서 풀어야 하는 문제였다.

<시행령> 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 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 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 ①(틀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설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지방공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③(틀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④(틀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206-208./ 2019 위계점 한국의 행정법령 p.265.

2. 주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은 없지만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②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③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25세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30세 이상이다.
- ④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이다.

[해설] ④(옳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①(틀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②(틀림)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③(틀림)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모두 25세이상이다.

공직선거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6조(피선거권)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160-161.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는 랭그로드(G. Langrod)이다.
- ②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이다’라는 말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 ③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부정설을 제기하는 학자는 ‘현대사회는 민주적 지방분권보다 능률적 중앙집권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④ 프랑스 학자 토크빌(A. de Toqueville)도 미국 민주주의론(Democracy in America) 저서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해설] ①(틀림) 랭그로드(G. Langrod)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자이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1) 관계긍정설 : 민주주의를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하면서 양자 간의 상호 보완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고유권설에 입각한 영미계의 자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K. Panter Brick, Alexis de Tocqueville, J. S. Mill, J. Bryce, H. J. Laski 등이 있다.  
 ① Mill은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지역사회 위주의 행정에는 결과적으로 중앙집권보다 지방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Bryce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였다.  
 (2) 관계부정설 : 지역사회의 정치적 모순을 인지하고, 이의 타파를 위하여 민주적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즉, 민주화된 정치체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란 무가치하며, 오히려 능률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주로 국권설에 입각한 대륙계의 자치에 근거하고 있으며, G. Langrod, H. Kelsen, Leo Moulin, G. C. S. Benson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① Moulin과 Langrod는 지방자치가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양산해 낸다고 하였다.  
 ② Cockburn은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이러한 전체 메커니즘의 일부일 뿐이라고 보았다.  
 ③ Madison은 정치의 권역이 지역단위에서 전국단위로 넓어질수록 특정 집단의 과도한 영향력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④ 관계부정설은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중앙선거의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가 참여의 기회를 반드시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16-17.

**4.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추진 및 행정수행에 적합
- ② 주민통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
- ③ 전국적·광역적 규모의 사무처리에 유리
- ④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

[해설] ③(틀림) 전국적·광역적 규모의 사무처리에 유리한 것은 중앙집권이다.

<p>1. 중앙집권의 장점</p> <p>(1) 중앙집권은 전국적 계획행정·통제행정·권력행정에 유용하다.</p> <p>(2) 국민형성·경제발전에 유리하며, 전국적·광역적 사업의 추진이 용이하다.</p> <p>(3) 정치적 통일성과 안정성 및 행정의 통일성·전문성·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p> <p>(4) 지역 간의 행·재정적 격차를 조정하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x</p> <p>(5) 국가적 비상사태나 위기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p> <p>(6) 부분적 이익을 전체 이익에 귀속시킬 수 있다.</p> <p>2. 지방분권의 장점</p> <p>(1)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지역경제와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p> <p>(2) 주민참여에 의한 계층·간·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의 사회적 능률(민주성)을 구현할 수 있다.</p> <p>(3)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통제를 통해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p> <p>(4) 환경 변화 및 주민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신속한 행정업무 수행).</p> <p>(5)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정의 종합 조정이 가능하다.</p> <p>(6) 지방공무원을 고도의 판단력과 식견을 갖춘 능력 있는 관리자로 훈련·양성할 수 있다.</p> <p>(7) 지방공무원 및 주민의 사기를 앙양하고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다.</p>
--

[정답] ③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30-31.

5.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에서 중층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중층제에서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②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행정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 ④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해설] ④(틀림) 중층제에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광역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의사전달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없다.

구분	단층제	중층제
업무 수행의 신속성	신속	지연
능률 증진 및 행정책임의 명확성	명확	모호(이중행정 및 이중감독의 폐단 발생)
지역의 특수성(개별성) 고려	존중(고려)	광역자치단체의 획일적 처리
국가의 통제	중앙집권화 우려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국가의 감독 기능 유지
중앙과 기초자치단체(또는 주민) 간의 소통	신속	지연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곤란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용이

[정답] ④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103-104.

6.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 ②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 등이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자치권 부여와 관련하여 자치권의 내용은 어느 국가나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

[해설] ④(틀림) 자치권 부여와 관련하여 자치권의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다. 특히 단체자치의 전통이 강한 국가와 주민자치의 전통이 강한 국가의 경우 자치권의 내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 ①(옳음) 지방자치(local government, local autonomy)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하에 그 지역 안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 ②③(옳음)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 등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10-11. 17-19.

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이라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②(틀림)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재의요구 및 제소>

1. 재의요구 및 제소 절차

- ① 지방의회의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①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의요구 사유

- ① 지방의회의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지방의회의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나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경우

[정답] ②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153-154.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보 기>

- ㄱ. 서울특별시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 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ㄷ. 서울특별시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사·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ㄹ.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조정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10.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④(틀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④번 지문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①(옳음) 지방채는 지방재정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공항시설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플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②(옳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24조).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③(옳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234-236.

11. 외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미국은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를 거쳐 '신연방제'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였다.
- ② 일본은 1990년대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
- ③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분권 및 자치 기능 역시 영국에 비해 더욱 발달하였다.
- ④ 뉴딜 이후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가가 강조되고 시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약시장-의회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해설] ②(옳음) 일본은 1990년대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 지방분권화를 추구하면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대신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축소하고 세원을 이양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①(틀림) 미국은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를 거쳐 '신연방제'의 이름 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시켰다. 1970년대 닉슨 행정부는 연방의 개입을 약화시키고, 주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건국 초기 분리형 연방제도의 회귀를 추구했으며, 이를 위해 세입공유제도의 폐지 등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주정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③(틀림) 1800년대 나폴레옹에 의해 형성된 중앙집권적 지방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오다가 1980년대 지방분권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분권 및 자치 기능 역시 영국에 비해 더욱 발달하였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④(틀림) 미국의 경우 뉴딜정책과 Johnson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의 실시로 지방정부의 기능은 확대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관계가 강화되었다. 행정의 복잡성과 행정적 리더십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도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강시장-의회제가 확대되었으며, 중·소규모의 도시들에서는 전문성 확보가 용이한 시정관리관제도로 전환되었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136-138, 279-288.

12. 「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재정위험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④(틀림)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이나 해제하려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도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218.

1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의 의무부와 사항에 대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③ 서울시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서울특별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①(틀림)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는 법률이 아니라 법령에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②(옳음)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옳음)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옳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12-13.

14. 지방정치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다원론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권력을 나누어 가진 다수의 집단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나간다.
- ② 레짐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 ③ 스톤(Stone)에 의하면 레짐이론에서 레짐이란 '지배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비공식적 연합'으로 정의된다.
- ④ 헌터(F. Hunter)와 몰로치(H. Molotch)는 엘리트론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권력이 지역의 경제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②(틀림) 레짐(regime)은 비공식적인 실체를 가진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으로서, 도시정부라는 제도적 기제를 매개체로 하여, 비공식적이지만 일정한 세력집단으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레짐이론은 '개인'이나 '구조'가 아닌 '제도'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주민집단과 같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는다. Stoker & Mossberger가 제시한 레짐의 유형에는 유기적 레짐, 도구적 레짐, 상징적 레짐이 있고, Stone이 제시한 레짐의 유형에는 현상유지레짐, 개발레짐, 중산계층진보레짐, 하층기회확장레짐 등이 있다. 따라서 '레짐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①(옳음) 다원론(Dahl, Polsby)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권력을 나누어 가진 다수의 집단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나간다고 주장한다.  
 ③(옳음) 스톤(Stone)에 의하면 레짐이론에서 레짐이란 '지배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비공식적 연합'으로 정의된다. 즉, 레짐(regime)은 비공식적인 실체를 가진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으로서, 도시정부라는 제도적 기제를 매개체로 하여, 비공식적이지만 일정한 세력집단으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④(옳음) 헌터(F. Hunter)와 몰로치(H. Molotch)는 엘리트론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권력이 지역의 경제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몰로치(H. Molotch)나 돔호프(W. Domhoff)는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의 관점에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자산가와 개발관계자들은 기업가, 금융업자, 그리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장연합을 구성하고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57-59.

1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 ④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해설] ③(틀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①(옳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옳음)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상의 예비비 사용의 제한>  
 (1) 지방재정법(제43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시행령(제48조) :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④(옳음)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등을 규정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196-200.

16. <보기>는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 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보 기>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 ㉡ ) (으)로 정한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 ㉣ ) 교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① | 1천분의 1,924 | 대통령령 | 100분의 50 | 전액 |
| ② | 1만분의 1,924 | 조례   | 100분의 50 | 일부 |
| ③ | 1만분의 1,924 | 대통령령 | 100분의 40 | 전액 |
| ④ | 1천분의 1,924 | 조례   | 100분의 40 | 일부 |

[해설]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지문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외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어진 문제의 지문 내에서 해답을 고른다면 정답은 ③번이 될 것이다.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지방교부세법).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

-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

[정답] ③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238-241.

1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③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한다.
-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해설] ③(틀림)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①(옳음)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옳음)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④(옳음)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96.

18.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서울특별시 의회는 14일의 범위에서, 자치구 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② 서울특별시 의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
- ③ 서울특별시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서울특별시는 시의회가 감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③(틀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①(옳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는 14일의 범위에서, 자치구 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라는 표현은 옳다.

②(옳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옳다.

④(옳음)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시의회가 감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옳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158-159.

19.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①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 ②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보통세와 목적세 수입액으로 하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 ③ 지방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 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②(틀림)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①(옳음)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③(옳음) 지방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옳음)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연중 수시로 교부할 수 있고, 그 교부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거나 비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 단체에도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교부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판단과 재량이 많이 개입되며, 정치적 관계나 각종 로비가 크게 작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 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238-241.

20.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9.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보 기>

- ㄱ.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관중인 사항
- 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ㄷ.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ㄹ.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 ㅁ.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ㅁ

[해설] ④(옳음) 주민투표법상 ㄱ, ㄴ, ㄷ, ㄹ, ㅁ 모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다.

<주민투표의 대상과 제외사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음의 사항은 제외한다.

- ①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관 중인 사항
- 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④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단, 지방의 회가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할 때에는 실시)
- ⑥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정답] ④

☞ 참고 : 2019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46-48.